

1.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9년 9월 6일
- 발 의 자 : 윤영애·김성태·이영애·이태순·임태상·장상수·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 :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9월 20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영애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우리사회는 정보·지식산업시대로, 정보와 지식이 물질적 자원이나 설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관리·이용되고 있으며,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또한 그 결정과 집행에서 각종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.
-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, 각종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개발·관리하고 있음.

- 특히, 이러한 용역은 정책계획단계에서의 정책효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예측자료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,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,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최근에는 정책실패 방지를 위한 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,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,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용역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용역의 시행이전, 해당 용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, 최근에는 정부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단기과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, 현재의 용역 관련 규정으로는 자칫 행정적으로 정한 절차에 매여, 긴급한 사안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.
- 또한, 현재의 규정은 한번 심의한 용역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, 자칫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을 확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용역 수행 중 정책계획의 변경을 오히려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용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말씀드린 바와 같이, 발의 취지에 따라 제5조와 제8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- 안 제5조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, 용역심의위원회 내 분야별 위원을 통한 긴급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용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심의 규정을 추가하였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곽영구)

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용역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운영상 나타난 다소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사전심의제의 효율성과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

- ▶ 안 제5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심의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들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.

《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[참고 1] 》

▶ 위원구성

- 17명 - 당연직(내부) 4명 / 위촉직 13명

▶ 위촉직 현황

- 학술·문화·복지 분야(5명), 건설·교통 분야(4명), 경제·과학 분야(4명)

- ▶ **안 제8조에서는** 제3호의 신설로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심의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하였으며, 대부분의 시·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[참고 2]
- ▶ **안 제8조의2에서는** 재심의 대상 용역의 기준 신설로 재심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, 보다 엄격한 용역심의로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음.

참 고 1**용역심의위원회 구성현황**

구 분		소 속		성 명	임명(위촉)일	심의분야
당연직 (4명)	위원장	대구광역시	기획조정실장	정 영 준	'17. 08. 14.	당연직
	위 원	"	경제국장	홍 석 준	'19. 01. 01.	"
	"	"	문화체육 관광국장	김 호 섭	'19. 01. 01.	' "
	"	"	도시재창조 국장	권 오 환	'19 01. 01.	"
위촉직 (13명)	위 원	대구가톨릭 대학교	경영학과 교수	조 성 자	'18. 04. 30.	학술·문화 ·복지분야
	"	영남이공 대학교	사회복지 ·보육 교수	이하예진	"	
	"	경북대학교	사회복지학과 교수	이 경 은	"	
	"	(사)한국 무용협회	대구광역시 지회장	강 정 선	"	
	"	대경대학교	병원의료행정 학과 교수	최 중 오	"	
	"	경일대학교	철도학과 교수	안 용 모	"	건설·교통 분야
	"	호진건축사사 무소	대표이사	정 명 숙	'17. 12. 29.	
	"	영남대학교	건설시스템 공학과 교수	최 현 일	'18. 04. 30.	
	"	(주)한도 엔지니어링	상하수도부 상무	이 종 탁	"	
	"	경북대학교	신소재공학부 교수	허 영 우	"	경제·과학 분야
	"	영남대학교	신소재공학부 교수	김 혜 경	'17. 12. 29.	
	"	경북대학교	물리학과 교수	김 홍 주	'18. 04. 30.	
	"	대구가톨릭 대학교	경제학과 교수	김 시 진	"	

참 고 2**타 시도 용역심의 제외대상**

구 분	제 외 대 상	비고
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	1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. 전산·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·검사 시험 3. <u>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</u> 4.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6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	
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1. 매년 반복되는 용역 2.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용역 3. <u>관련규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용역</u>	
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	1. <u>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</u> 2. 전액 국고보조 용역 3. 계속사업 등으로 심의된 용역 4. 그 밖에 비상사태,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	
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	1. 예산 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. <u>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</u> 4.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	
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	1.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 2. 전액 국고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. <u>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</u>	
경기도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1. <u>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</u>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3. 기술용역 및 디자인·전산개발, 임상연구, 회계용역, 단순 설문 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	

구 분	제 외 대 상	비고
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. 기술·전산·임상연구,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.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	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산 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	
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다만, <u>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한다.</u>	
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산 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. <u>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</u> 4.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. 단,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. 	
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</u>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. 기술·디자인·전산·임상연구, 회계용역,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. 천재지변 복구,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	
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경우 2. <u>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</u> 3.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	
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. <u>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</u> 3.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4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	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답
<p>○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분야별 위원으로만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,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?</p> <p>○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용역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.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, 분야별 위원으로만 심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?</p>	<p>○ 용역심의위원회는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, 긴급한 용역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음.</p> <p>○ 용역심의 절차를 말씀 드리면, 먼저 각 부서에서 용역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실무적으로 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,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번 더 사전검토를 실시함. 그 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바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 심사를 받게 되므로 용역을 충분히 검토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.</p>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